

강릉·대전서도... 전파관리소 수년간 국민 불법감청

광주 이어 영장없이 영상·대화 수집...도박단 검거 홍보까지 법조계 “절차 정당성 위반 엄연한 불법”...통제장치 마련 지적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신재해 있는 지역전파관리소 상당수가 수년간 국민을 상대로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파감시 업무 과정에서 범원의 영장 없이 사물에 걸쳐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와 카메라로 촬영 중인 영상을 외부에서 실시간 수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파관리소 뿐만 아니라 강릉·대전 전파관리소도 영장 없이 대화나 영상을 수집한 것이다.

25일 강릉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이 지난 1일 사기도박 혐의로 구속한 이모(30)씨 등 일당 4명의 검거에는 강릉전파관리소의 제보가 바탕이 됐다. 강릉전파관리소는 전파감시 과정에서 이상 주파수를 탐지하고서 이씨 등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도박 장면을 촬영해 외부 일당에 전송한 카메라 영상 10여 초를 수집, 경찰에 건넸다고 한다. 당시 사기도박단에 대한 영상 수집 과정에서 범원의 영장은 발부반지 않았다고 강릉전파관리소는 밝혔다.

대전전파관리소의 경우 지난해 3월 첨단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고 영상을 수집하는 수기를 중앙전파관리소 웹진 5~6월호에 올렸다. 대전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감청 논란과 관련해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업무의 목적은 정당하다라도 절차에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파감시 업무 수행 중 범원 영장 없이 사기도박단의 영상과 대화를 중간에서 실시간 수집한 혐의로 최근 수사 선상에 오른 광주전파소 뿐만 아니라 대전·강릉전파관리소도 절차의 정당성 확보 없이 불법 감청을 저지른 것이다. 이상 전파를 탐지하고 사기도박단의 위치를 특정한 이후라

면 수사기관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법원에 감청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뒤 대화나 영상 수집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이상 전파를 탐지하고 감청세력을 적발하는 업무를 부여받는데 이를 수행할 능력까지 갖춘 국가기관이란 점에서 자의적 판단 아래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감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정훈 변호사는 “전파관리소 직원들이 전파법에 따라 영장도 없이 통신 내용과 영상을 수집하는 게 합법이라면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확실하다”면서 “첨단 설비를 이용한 사기도박단을 검거한다는 이유로라도 영장없

이 감청을 하는 건 국가정보원도 불가능한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보호비밀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영장)를 받고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논란이 된 이유로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사기 잠적 구의원 검거 구속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잠적한 광주 한 기초의원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의회 A의원을 검거,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의원은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지인 B씨에게 40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2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감지 않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피해 잠적한 A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2개월분 601만 4640원을 지급,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업무 일환...실적 부담 커 감청” 주장

광주전파관리소 2명 소환조사

불법 감청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전파관리소 직원들이 경찰에 소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적 부담이 너무 커 감청했다”고 진술했다. 광주광산경찰청은 25일 무전을 이용한 사기도박 단 남모(36)씨 일당 적발 과정에서 불법 감청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전파관리소 직원 A씨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광주전파관리소에 수사관을 보내 전파감시 업무 수행과정에서 영상 및 대화수집에 대한 경위서를 A씨 등으로부터 넘겨받는데 이어 이날 A씨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지난 20일 이상 전파를 감시하고서 사물에 걸쳐 사기도박 단 남모 일당이 주고 받은 무전과 카메라에 녹화 중인 영상을 중간에서 실시간 수집, 그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범원의 영장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통신비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전파관리소 직원) 실적 부담이 컸다고 토로하면서 도 전파법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면서 “사기도박단의 영상과 대화를 원거리에서 실시간 수집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제기된 의혹을 수사를 통해 밝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선물 들고 고려인마을로 광주 송의중학교(교장 김해숙) 학생들이 25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생필품과 과일 등을 전달하기 위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려인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통신비밀보호법에 사용 불가 명문화

불법감청 증거 능력은?

광주전파관리소가 사물에 걸쳐 수집한 사기도박단과 그 피해자들의 대화 및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의 허가(영장)나 다른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감청이 아닌 불법감청은 아예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법조계와 수사기관 관계자 역시 전파관리소가 수집한 사기도박단의 무전 내용과 도박 영상은 그들의 사기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광산경찰도 전파관리소가 수집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면, 불법감청 의혹을 받고 광주 광산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파관리소 직원 A씨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통신비밀보호법(16조)에 따르면 불법 감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불법 감청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수집된 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같은 형에 처할 정도로 벌칙이 엄격하다.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불법 도청된 테이프에 거론된 뇌물수수 검사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임신한 여친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10대 검거

임신 알린다는 말에 격분 화순경찰, 구속영장 신청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와 붙잡힌 남성은 올해 나란히 같은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화순경찰청은 25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군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로 김군의 고등학교 동창 양모(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화순군 도암면 한 공터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50m가량 떨어진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24일 밤 10시10분께 입술이 터지고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A양이 임신한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내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화를 내면서 말다툼이 있었고, 임신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범행 직후 고등학교 동창인 양군을 불러 A양의 시신을 눈에 띄지 않는 하천에 숨겼으며, A양의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제거해 버리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군과 A양은 6개월 전부터 사귀었으며, 지난해 12월에 임신 사실을 안 것으로 확인됐다. 둘은 오는 3월 광주에 있는 한 대학에 나란히 입학할 예정이었다. A양은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아 같은 날 밤 10시27분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양의 시신을 26일 부검할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건설사, 방송국 부당지원” 3개 단체, 공정위에 진정서

참여자치21, 광주경찰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3개 단체는 H건설과 계열사인 모 방송국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H건설의 부당지원과 관련 H건설과 모 방송국에 대해 시정조치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 관련자 고발 등을 진정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H건설이 지역 3개 대학에 각 5억원의 기부금을 낸 뒤 일부를 계열사인 모 방송국에 광고·홍보비 등으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엄정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범행현장 우유 흘려 절도 들통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범행 현장에 흘렸던 우유를 범행 현장에 흘렸다가 경찰에 들킨다. ○~25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권모(여·54)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1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최모(여·45)씨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 ○~권씨는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수감중으로, 경찰은 “권씨가 돈을 훔치면서 다른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 마시던 우유를 범행 현장에 흘렸는데, CCTV를 통해 권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후문/북구청 주차장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첨단지구 8층 상가, 오피스텔 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및 상가 전문 건물)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음)

▣ 감정가 (분할등기시) → 56억
▣ 용자 → 31억 가능
▣ 매가 → 38억

010 - 6834 - 4800 010 - 6832 - 9700